국힘 "오염수 방류 7개월 뒤 방사능 나오면 책임 지겠다"

'우리바다 TF' 수산업계 간담회
수산물 소비 촉진 등 대책 요구
여야 공동 전문가 토론회도 제안

국민의힘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정치적 책임'까지 내세우는 강수를 뒀다.

야당에서 이어지고 있는 대정부 비판 공세를 차단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는 28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7개월 뒤 국내 해역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이 검출된다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TF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해양수산부와 수산업계 대표자들이 참석한 회의를 마친 후 "민주당은 검증되지도 않은 외국 자료를 인용하며 5~7개월 후 우리 바다로 방사능 물질이 유입될 것이란 주장을 계속해왔다"며 "5~7개월 뒤 대한민국 바다에서 이런 방사능 물질이 나온다면 저희가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여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정치적 책임'까지 내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야당이 공세를 취하고 있는 오염수에 대한 우려를 야권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프레임으로 차단하면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정치적 책임까지 앞세워 '배수진'을 친 것으로 해석된다.

성 위원장은 "민주당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로 인한) 오염수 방출로 우리 바다에 어떤 영향도 없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고, 국제적 기준 내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한다면 문제가 없다는 것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며 "알고 있으면서도 당 대표를 비롯해 정치적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몇몇 정치인들에 의해 여론이 호도되고 있다면 후과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위원장은 그러면서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을 따져보는 전문가 토론회를 여야 공동으로 개최하자고도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서 TF와 수산업계는 오염수 방류 괴담으로 인한 수산업계 피해가 우려될 경우 적극 개입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성 위원장은 "소비 촉진을 위해 과감한 예산 편성을 통해 우리 어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책적 측면에서 대책을 세워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후쿠시마산(産) 세슘 검출 우럭' 논란으로 인해 국내 우럭은 물론 멍게, 전복 소비가 감소하고 있다며 "해수부에 이 부분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매 비축을 통해 우리 수산물 가격을 지지하겠다"며 "전복 등 품목에 대해서는 할인행사를 바로 추진해 소비 유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수산업계는 오염수 방류 논란에 따른 정부·여당의 조속한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의 '수산인 건의서'를 당에 전달하기도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69주년 기념식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횟집 투어 말고 후쿠시마 한달살이 하라"

오염수 방류 대정부 비판 공세
국힘 "이제 괴담까지 수출" 비난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대정부 비판 공세를 이어갔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겨냥해 "괴담 수출까지 하려 한다"며 비난을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구연 국무1차장이 지난 26일 정부 브리핑 당시 "방류 결정을 되돌려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에 다른 방식을 제안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상 맞지 않는다"고 언급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박 최고위원은 "일본 정부 관계자의 설명인가"라며 "피해를 최소화할 다른 대안이 많은데 왜 방류가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고 두둔하나"라고 반문했다.

또 "일본 정부의 이익을 대변할 거라면 대한민국 공직자 자격이 없다"고 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원내 대표단이 횟집 등에서 잇따라 회식을 하는 것에 대해 "일본 홍보대사 같다"고 비난했다.

이어 "정녕 쇼를 하고 싶으면 횟집투어를 할 게 아니라 후쿠시마 한 달살이를 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검증 특위 구성 등에 동참할 것도 여당에 촉구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전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수산물 방사능 검사 확대 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킬 때 여당이 퇴장한 것을 문제 삼으며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저지 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IAEA(국제원자력기구)를 향해 일본이 지원하는 오염수 안전성 검증 비용의 규모, 이에 따라 검증 중립성 확보가 어렵다는 우려에 대한 입장 등을 따져 물었다. 대책위는 이러한 질의를 담은 서한을 IAEA에 발송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에만 당 우리바다지키기 태스크포스(TF) 주도로 원내지도부와 관계부처가 함께 회의를 여는가 하면 당내 의원모임인 '국민공감'에서도 1985년 미국 문화원 점거 사건을 주도했던 '86 운동권'이자 민주당의 오염수 관련 대응에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함운경 씨를 연사로 부르는 등 대야 공세에 화력을 집중시켰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인사말에서 "어제 농해수위에서는 듣도보지도 못한 촉구 결의안을 단독·강행 처리하고, 유엔 총회에 의제로 올리자고 하고, 태평양도서국에 연대하자고 하는 뜬금없는 연대 쇼를 벌인다"며 "이 문제를 국제문제화하고, 괴담 수출까지 하려고 한다"고 민주당을 비난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윤 대통령 "허위 선동·조작·가짜뉴스가 자유대한민국 위협"

자유총연맹 69주년 기념행사 축사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허위 선동, 조작, 가짜뉴스가 자유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기념행사 축사에서 "우리가 많은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올바른 역사관, 책임 있는 국가관, 명확한 안보관을 강조하며 "자유민주주의라는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강력한 연대를 구축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키는 문제로 자유대한민국에 대한 애정과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에 대한 헌신적 자세로 이 나라와 미래 세대를 지켜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직 대통령이 자유총연맹 창립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은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24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구대원 자유총연맹 부산광역시지부 부회장, 류명선 정읍시지회 부회장 등 18명에게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민운동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훈·포장 및 표창을 직접 수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석호 자유총연맹 총재를 비롯해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직무대행),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 자유총연맹 회원, 정관계 인사와 15개 유관단체 등 4000여 명이 참석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정부 "日오염수, 올 ALPS 처리후 기준 이상 검출 핵종 없어"

해수차관 "확보 천일염 400t 방출"

정부는 28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 "올해 들어 분석한 내용을 보면 현재 개량된 다핵종제거설비(ALPS) 기준으로는 처리 후 오염수에서 배출기준 이상으로 검출된 방사성 핵종은 없는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정부 일일 브리핑에서 "일본 도쿄전력이 가동한 ALPS의 입·출구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받아 한국 시찰단이 분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 시찰단 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전날 일일브리핑에서 2013년부터 최근까지 ALPS 입·출구에서 측정된 모든 핵종의 농도 자료를 정밀분석한 결과 배출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적이 있는 핵종이 모두 6개였으며 이 중 대부분은 2019년 이전에 포착됐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차장은 유 위원장의 전날 발언을 언급하며 "현재까지 처리된 오염수 탱크 중 70%에서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핵종이 최대 6개까지 검출됐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들어서도 매일 오염수 100t가량이 새로 발생하는데, 이는 ALPS를 통과했을 때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잠정 파악했다"며 "ALPS 기술이 점점 향상되고 안정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최근 사재기 논란이 일고 있는 천일염과 관련, "정부에서 확보한 물량 중 우선 400t을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방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11월 김장철을 맞아 469t을 방출한 바 있다.

/연합뉴스